

한국경제, '국민 행복시대' 로 갈 수 있나

2013.01.09 | 정태인_새사연 원장 | ctain60@gmail.com

목차

1. 2012년 빛나간 예측
2. 2013년 전망
3. '국민 행복시대'를 만드는 법

새사연은 2006년에 설립된 진보적 민간 연구소입니다.
정부와 기업의 지원을 받지 않으며,
회원들의 후원회비를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1. 2012년 빛나간 예측

12월 19일 박근혜 후보가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내년 2월이면 박근혜 정부가 출범된다. 과연 그의 구호 ‘국민행복시대는 열릴 것인가?’

올바른 경제예측에 근거한 정책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물론 중장기의 구조정책은 1년 단위의 경제전망과 거의 무관하게 구상할 수 있지만 1년 단위의 재정이나 고용, 환율과 이자율과 같은 거시변수는 직접 영향을 받는다. 과연 우리 정부의 예측 능력은 어떠한가?

<표1> 정부, 한은, 국회예정치의 경제전망

()는 발표일	2012		2013		
	정부 (11.12.12)	정부 (12.27)	정부 (12.27)	한은 (10.11)	국회 (10.)
세계	3.4	3.3	3.6	3.5	3.6
GDP	3.7	2.1	3.0	3.2	3.5
민간소비	3.1	1.8	2.7	3.0	2.5
설비투자	3.3	-1.4	3.5	5.0	4.5
건설투자	2.9	-0.4	2.0	2.9	0.2
상품수출(통관)	7.4	-1.3	4.3	7.5	5.6
상품수입(통관)	8.4	-1.0	4.6	6.9	5.3
경상수지 (억달러, 통관)	160	420	300	250	219.3
고용(만명)	28	44	32	32	35
소비자물가	3.2	2.2	2.7	2.7	2.5

*출처 : 기획재정부, ‘2013년 경제전망’, 2012.12.27

한은, ‘2012-13년 경제전망’, 2012.10

국회 예산정책처, ‘2013년 및 중기 경제전망. 재정분석’, 2012.10

우선 2012년의 실적부터 보자. 왼쪽은 정부가 지난 2011년 12월 12일에 발표한 전망치이고 오른쪽은 지난 12월 27일에 발표한 전망치이다. 물론 후자는 3분기까

지의 실적에 근거한 것이니까 훨씬 더 현실에 가깝다. 놀랍게도 1.6%p나 차이가 난다. 이걸 불가피한 일이었을까? 천만의 말씀이다. 작년 1월 새로운사회를위한연구원(이하 새사연)은 “‘비교적 낙관적 가정’하에서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2% 중반쯤에 머물 것으로 예측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새사연은 이 보고서에서 GDP의 모든 구성 항목이 전망치보다 낮은 성과를 보일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과연 2012년의 실적치는 모든 항목에서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심지어 수출입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다만 수입의 감소폭이 더 커서 경상수지가 40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낸 것만 경제 성장률을 끌어 올렸다. 또 하나의 항목인 고용이 예상보다 증가했는데 이는 자영업과 비정규직의 증가로 설명된다(새사연 브리핑 ‘2012년 7월 고용시장 분석’ 참조, 김수현, 2012.8.30).

그렇다면 2013년 예측도 비슷하게 엉터리일까? 다행히 그렇지 않다. 정부는 지난 9월, 2013년 예산안을 짤 때 경제 성장률을 4.0%로 예측했다. 그리고 3개월 남짓 지난 12월 27일 정부는 금년 성장률을 3.0%로, 무려 1%p나 하향 조정했다. 차기 정부에는 조금 더 객관적인 수치를 넘겨야 한다고 생각한 것일까? 우리는 가계부채와 같은 폭탄이 터지지 않고 그럭저럭 지나가는 경우라 해도 이 수치 역시 0.5% 정도 과장됐다고 믿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세계경제는 장기침체에 빠져 들고, 국내에서는 1000조원 규모의 가계부채라는 시한폭탄이 켜켜거리고 있는데도 ‘국민행복시대’를 열 수 있을까? 항목 별로 살펴보기로 하자. 다행히 이번에 참고할 세 기관의 예측은 비슷하다. 다만 한은과 국회 예정치의 경우 10월 전망치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낙관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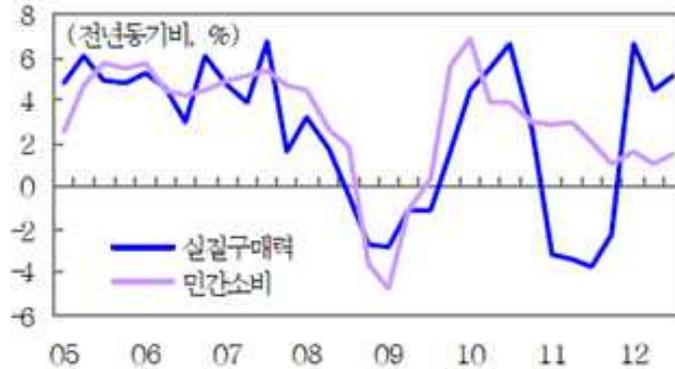
2. 2013년 전망

1) 민간소비

세 기관은 민간소비 증가율을 2.5%에서 3.0%로 예측했다. 작년의 1.8%에 비하면 꽤 많은 소비 증가가 일어날 것이라고 본 것이다. ‘대외 불확실성의 감소’와 같은

튼구름 잡는 말을 빼면, 그 근거는 실질구매력(실질임금*취업자 수)의 증가에 있고 특히 취업자 수가 늘었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그림1> 참조).

<그림1>가계 실질구매력과 민간소비



*주: 실질구매력=실질임금×취업자 수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출처: 기획재정부, p43

실제로 작년의 저성장에도 불구하고 고용은 45만 명가량 증가했다. 문제는 고용의 질이다. 이 중 절반가량은 자영업 및 연관 고용의 증가이며 나머지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이다(새사연 브리핑 ‘2012년 7월 고용시장 분석’ 참조, 김수현, 2012.8.30). 말하자면 소비 여력이 풍부한 노동자들이 늘어난 것이 아니다. 더구나 그런 자영업이 금년에도 계속 같은 비율로 증가하리라고 가정하는 건 대단히 비현실적이다.

가계부채는 민간소비를 옥죄는 강력한 올라미다. 작년의 상당한 고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미미하게 증가(1.8%)한 것도 가계부채 때문일 것이다. 금년에도 작년과 거의 비슷한 규모로 원리금 상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전체 부채의 약 20%)을 감안하면 금년의 소비증가는 작년의 증가율보다도 낮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GDP의 절반을 차지하는 소비의 증가율이 세 기관의 예측에 비해 0.5%~1%p 낮을 것이라 예상된다. 즉 GDP 증가율은 이 항목과 관련해서 약 0.25~0.5%p 정도 줄어들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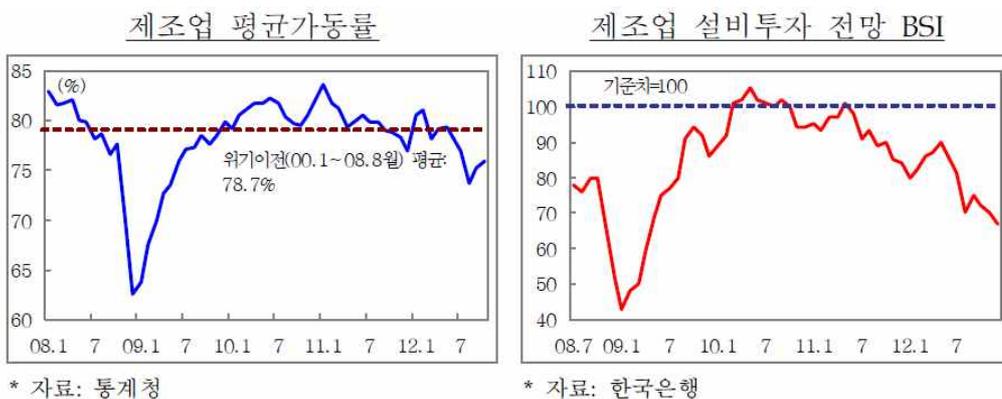
2) 설비투자

작년에 마이너스 증가율(-1.4%)을 보인 설비투자에 관해서 세 기관은 3.5~5%의 증가를 예상했다. 그 근거에는 “세계경제가 완만한 회복 움직임을 보이면서”(한은, p3), "수출이 개선될 경우“(기재부, p46)와 같이 불확실성이 잔뜩 깔려 있다. 마찬가지로 예정처도 “국내기업은 주요국의 실질지표가 호전되고 수출수요가 증가한 것을 확인한 이후에야 적극적인 생산설비 확장에 나설 것”(예정처, p26)으로 내다보고 있다. 즉 이들 모두 세계경제의 호전과 수출 증가를 가정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번 보고서(세사연 브리핑 ‘2013년, 피할 수 없는 세계경제 장기침체’, 여경훈, 2013.1.7)에서 보았듯이 유럽이 파국을 피하고 미국은 ‘재정절벽’의 문제를 아슬아슬하게 피했다 하더라도 긴축정책의 영향으로 세계경제는 장기침체에 빠져 들 것으로 보인다. 즉 세계경제가 호전되어 수출이 증가할 확률이 낮기 때문에 세 기관도 과거와 달리 상당히 보수적으로 설비투자 증가율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현실의 지표는 이런 증가율마저 그리 녹록치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2> 제조업 평균가동률과 제조업 설비투자 전망 BSI



*출처, 기획재정부, p46

<그림2>에서 보듯이 평균 가동률은 75%선에서 머물고 있고 기업에게 설비투자 의향을 묻은 BSI지수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중이다. 결국 설비투자 증가율 3.5~5%도 상당한 희망이 섞여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박근혜 정부에 대한 환영

선물, 또는 공포로 현금 여력이 풍부한 일부 대기업이 장기 투자를 할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수치는 줄어들 가능성이 더 크다.

3) 여전히 희망은 건설투자?

건설투자는 세 기관의 예측이 가장 많이 어긋났다. 예정치는 0.2%, 정부는 2%, 그리고 한은은 2.9%의 증가를 전망했다.

세 기관 모두 주택 건설이 금년에도 부진할 것이라는 점에 관해서는 일치한다. 기획재정부는 여기에서도 “주택시장 여건이 완만하게 개선되면서 투자도 점차 회복될 전망”이라고 미련을 못 버렸지만, 미분양 주택의 적체가 계속되고 건설업체의 부채 비율이나 수익성으로 봐도, 또 건설 BSI 등 지표를 봐도 주택건설이 활발하게 일어날 근거는 찾기 어렵다. 특히 예정치는 가계부채 대책이 주택 수요도 제약할 것이고 그 동안 활발했던 지방의 주택건설도 침체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다만 정부가 내년도 SOC 예산을 4년 만에 증가(3.4%)시켰으므로 평창 동계올림픽 시설 등에서 토목건설이 증가하고, 그리고 행정도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건물 신축 등 비주거용 건축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건설 부문은 정부가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으므로 2%까지 증가할 수도 있겠지만 이 수치 역시 떨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

4) 오리무중 수출입

수출은 세 기관이 4.3~7.5%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고 경상수지는 220억 달러~300억 달러의 흑자를 예상했다.

근거는 모두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이다. 유럽이 한 고비를 넘겼고 일본까지 가세해서 통화를 증발하는 양적완화에 들어갔기 때문에 교역량이 어느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중국이 내수진작에 의해 성장률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도 한국의 수출 증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재 한국의 수출은 일반기계와 반도체가 이끌고 있지만 중국의 성장률이 7% 이하로 떨어질 경우 수출은 금년처럼 마이너스의 머물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환율이다. 과연 원화는 어느 정도나 절상될 것인가? 정부와 한은은 저금리로 대응하겠지만 토빈세와 같은 과속방지턱 없이 흘러드는 돈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만일 원화가 빠른 속도로 절상된다면 수출 역시 정부의 예측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수출침체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의 감소에 따라 경상수지는 흑자를 보일 가능성이 큰데 그 규모는 유가 등 원자재가격이 좌우할 것이다.

3. ‘국민행복시대’를 만드는 법

이상을 종합해 보면 금년도 한국 경제 성장률은 2.5% 정도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물론 세계경제가 그러저럭 또 한 해를 넘길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 그렇다. 박근혜 정부는 2.5% 성장 속에서도 ‘국민행복시대’를 열 수 있을까?

현재의 정책기조 하에서는 어렵다. 무리하게 수출 진작책을 쓴다면 국제적인 통화전쟁에 직면할 것이고 건설경기를 일으키면 내년이나 후년에 더 큰 보복을 당할 것이다. 물론 방법은 있다. 우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내부의 문제부터 수습하는 것이다. 국내외 경제 상황을 볼 때 소득을 증가시키면 가계부채가 자연스레 해결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대단히 안이한 생각이다. 오히려 은행에 여력이 있을 때 빠른 속도로 가계부채의 부담을 분담하게 해서 서민층의 소비를 늘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동시에 서민층에 대한 복지를 획기적으로 늘린다면 현재 1% 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소비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외에도 중산층의 소비를 제약하고 있는 사교육비, 의료비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결국 ‘밖으로부터, 위로부터의 성장’을 ‘안으로부터, 아래로부터’의 성장으로 바꾸는 길 밖에 없다. 불행하게도 현재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국민행복시대’를 열 방법은 없다. 🚧